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 2013년 4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4월 13일 ~ 2013년 4월 26일

### 주요 키워드

- 1. '네트워크병원 처벌유예법안' 발의**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조항'을 허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지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하는 것'임.
- 2.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 유보** :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이날 노조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기대한 것과 달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업과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입장 차이를 보임. 한편, 홍 도지사는 '경남 서민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함.
- 3.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될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조치 8가지'를 발표함. 8개항 내용은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
- 4. 복지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 : 복지부는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 논의 후 이달 말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사를 통해 선택진료·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과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
- 5. 기타** : 수가협상 5월 계약 등 40개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결과 발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열려, UAE 군병원환자 한국에서 진료 MOU 체결,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환자, 이틀만에 사망, 싱가포르 한국형 보건의료관리 시스템에 지속적 관심, 고양시-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 업무협약 체결

### 1. 보건의료정책

#### ○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 (4. 15)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를 대놓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의 공공병원은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료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또 "공공병원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지역정부가 협조해서 지원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의료와 공공병원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이다. 김 의원은 “광역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주체로서 여러 가지 자본적 투자를 충분히 해주고 지역의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해준 다음 평가·감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 복지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00억 지원 (4. 17)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해당 예산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3년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새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총 4461억원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을 민생안정 3616억원·일자리 495억원·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하고, 2012년도까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2031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치했다. 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104억원) ▲광역치매관리센터 4→14개로 확대(98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25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100억원) 등의 의료관련 항목을 포함시켰다.

#### ○ 수가협상 5월 계약 등 40개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4. 17)

수가협상 계약 기한을 5월로 변경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등 40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16일 총 52건의 법안을 심사했으나, 리베이트 금지법 등에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12개 법안을 심의법안에서 제외하고 40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외된 리베이트 금지법, 3개월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등의 약사법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큰 이견없이 수가협상 기간을 5월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7건과 국민연금법 4건, 노인복지법 3건, 실험동물에 관한 법 1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1건 등 40건의 개정 법안을 의결했다.

#### ○ 직장인 건보료 평균 13만2000원 더 낸다 (4. 18)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달 건강보험료에 2012년도 정산금액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직장인은 평균 6만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경 이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1조6234억원)보다 358억원 감소한 1조5876억원(120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산은 1200만명 중 750만명으로부터 1조8968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226만명에겐 3092억원을 돌려주며, 임금변동이 없는 224만명은 정산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자금 운영 등의 이유로 보수 변동사항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징수 금액이 높은 이유”라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복지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 (4. 22)

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을 논의한 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선택진료·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들의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과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의료서비스공급자·일반국민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날 기획단은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의 실태 조사 방법을 내놓았으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이언주 의원, ‘환자 입원 거부시 위원회 결정 있어야만 입원 가능’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 **발의 (4. 24)**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통합당 이연주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의 입원결정 시에만 입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는 시·도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신병원에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4. 24)**

전공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조치 8가지'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8개항 내용은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추후 수련규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해 미준수시 전공의 정원배정에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며,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선조치는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이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이 개선돼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공의 수련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협이 전공의의 근무시간 상한제에 반발, PA(의사보조인력) 양성을 통해 전공의가 빠진 인력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수련병원의 진료공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대체인력을 인건비 부담이 큰 전문의보다 PA 채용이 병원경영에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PA 고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오는 2014년도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내년 2~4년차 전공의에게 노동쏠림이 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결과 발표 (4. 25)**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았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을 살펴보면 암 관련 항목이 가장 많았으며, 희귀난치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련 항목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3월 27일~4월 16일까지 ▲텔레이 간담회(6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병원 대상 비급여 실태조사로부터 결과를 도출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열려 (4. 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내 피신청인 동의 규정 삭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강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은 조정참여 거부 자체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쪽은 강제적인 절차 진행이 오히려 조정 성립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 27조 제 8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그러다보니 환자가 대부분인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의료인은 무조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1년간 조정참여율이 39.9%에 그쳤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이 조항이 제대로 된 의료분쟁조정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와 국회도 조정 강제화에 무게를 실어줬다. 반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은 조정 참여를 강제화하면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동욱 대한 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중재원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의료행위에 대해 객관적 사실 규명 능력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징벌적 조항에는 과도한 규제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 서영조 의원, '네트워크병원 처벌유예법안' 발의 (4. 26)

최근 국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조항'을 허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지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적용을 7년간 유예하는 것' 이다. 서 의원실은 이번 개정법안의 취지가 네트워크 병원이 비영리 법인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네트워크 병원의 비영리 법인전환 또는 소유·운영권 변경을 위해 작동되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법안 개정 취지에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면서까지 7년이나 되는 장기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에 배치되고,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보건의료산업/기술

#### ○ UAE 군병원환자, 한국에서 진료 MOU 체결 (4. 12)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통합군의 군병원환자 800여명(연간)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96억원의 진료수입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료 우수성 입증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UAE Armed Forces(UAE 군)은 12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공식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UAE 군은 군병원환자 일부를 한국 내 4개 의료기관으로 송출하기로 합의했으며, 환자 규모는 연간 외국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하는 인원의 20%, 즉 4000여명 중 8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협약식에는 ▲UAE 군병원 방문 후 수술시연 및 교육 지원(Visiting Physician)▲UAE 군 내 유-헬스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과의 의료시스템 이전 합의에 이어 UAE 군 환자송출계약 체결까지 이번주 동안 이루어져, 의료서비스를 통한 '제2의 중동 붐'이 조성될 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 美 대법원, 인간유전자 특허 재판 시작 (4. 15)

인간 유전자의 특허권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재판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유전자 진단사인 미리어드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2종에 대한 특허권이 쟁점사항이다. 미리어드는 지난 2009년 여성의 유

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BRCA1'과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해 왔다. 미리어드사는 상기 유전자의 특허권을 확보해 암 발병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특허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은 특정 인간 유전자가 하늘이 주신 산물이므로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허권을 주게 되면 특허를 받은 자가 해당 유전자를 분석할 권리도 독점할 수 있어 정보를 통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1심 재판에서 ACLU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미리어드가 웃었다.

#### ○ 日 자민당, 의료기기·의약품 구입 소비세 감면 추진 (4. 17)

일본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해 소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자민당은 의료기관이 고액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의 소비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세제에서는 의료기관이 받는 진료 보수는 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소비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세제상 부담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 등이 첨단 고가의 장비 등을 도입하는 데 큰 부담이 돼왔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의료기관이 고액의 투자를 할 때 지불하는 소비세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고액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안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의료 관련 세제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 ○ 의료기관 허위·과대 광고 증가 (4. 17)

의료기관들의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의 평가 이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내역 분석 결과,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59건)보다 1.6배 많았다.

#### ○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환자, 이틀만에 사망 (4. 18)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을 종용당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지 이틀 만에 사망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있던 왕모씨(80세, 여)는 지난 16일 전원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겼으나 43시간만인 18일 오전 6시40분께 숨졌다. 왕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계속 퇴원하라는 압력에 시달려오다 무리한 전원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경상남도는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을 강요해왔다"며 "지금까지 170여명의 환자들이 강제로 내쫓겼다. 결국 강제 전원당한 환자가 이틀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홍준표 지사를 비난했다. 노조는 "한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홍 도지사는 강제전원당한 환자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냐고 변명할 것인가"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폭정을 중단하고 도민앞에 사과하라. 또 휴폐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건보공단,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4.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8일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료복지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각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 올해엔 지난 2월13~27일까지 보름 동안 기업체 1013개, 지자체 433개, 공공기관

76개 등 1522개 브랜드에 대한 16세 이상 국내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 결과 국민건강보험이 2년 연속으로 '의료복지서비스부문'의 대상 브랜드로 선정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2년 연속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은 큰 영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숙제이기도 하다"며 "의료비 걱정 없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 **日 아베 총리, 신성장 핵심전략으로 의료산업 제시 (4. 1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성장 핵심전략으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 '개방성', '혁신'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한 '통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미 '재생의료 추진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후생노동성이 iPS세포(인공다능성 줄기세포) 등을 사용한 재생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그 개발과 실용화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iPS세포 연구 및 발전에 선점을 기하고자 만든 것이다. 법안은 의료 연구개발 예산을 중앙에서 처리하는 조직을 설치해 의료 관련 기업과 협력, 연구 개발 성과를 조기에 신약 개발로 연결하고 의료기기의 실용화 등 다양한 지원분야와 연계해 선진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나아가 신성장 전략에 일본형 NIH(미국의 국립보건원) 설립 방침을 명기하고 관련법을 정비한 뒤, 내년 중 설치할 예정이다.

#### ○ **싱가포르,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에 지속적 관심 (4.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싱가포르탄독생 국립병원이 단일건강보험체계에서의 효율적인 보건 의료시스템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탄독생국립병원은 170여년 전통의 싱가포르 최대국립병원으로 동남아 의료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7년 이래 한국클리닉을 개설하는 등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으로 보편적의료보장(UHC)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방문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라는 공통점을 가진 한국의 사례를 학습하고 UHC 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독생 국립병원은 22일부터 나흘간의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기반 통합보건의료시스템 및 전산화된 심사평가시스템의 우수성을 배우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의료적정성 유지 역할을 체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심평원에는 베트남 보건부장관, 몽골 보건부장관, WHO·Wpro사무총장, OECD 보건분과위원장 등 7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35명이 방문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사례 및 통합보건의료시스템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다.

#### ○ **인공지능형 스마트병원 시대 (4. 23)**

병원정보시스템이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 종이차트가 하던 일을 전자차트가 대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필요한 데이터를 판단해 보여주고, 환자에게 위대한 상황을 걸러서 막아주거나 알려주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형으로 발전한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03년 세계 최초로 EMR(전자의무기록) 개발에 성공해 종이·차트·필름 등이 없는 100% 디지털병원으로 오픈한 이후 인공지능형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지케어텍과 함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 1년 8개월 만에 완성했다.

#### ○ **고양시-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 업무협약 체결 (4. 23)**

고양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의 상호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최성 고양시장과 김세철 명지병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명지병원 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민간의료기관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 본격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시작한 명지병원과 고양시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기여하는 모범을 창출하고자 체결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고양시와 명지병원은 고양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

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실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명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활동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교육, 정보 등을 지원하며, 명지병원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보건의료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게 된다.

#### ○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 유보 (4. 23)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간 유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재개 ▲철탑 농성 해제 등 3가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경남도청 별관 5층 옥상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은 농성을 풀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전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노조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기대한 것과 달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업과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합의문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날 홍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 전면 무상의료 시행, 서부경남 의료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모든 의료급여1종 수급자 7만8000명에게 간병비를 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는 등 이른바 ‘경남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 34개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 응급전문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주 중에 진주의료원 환자 전원이 마무리되면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폐업 카드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달간 유보했을 뿐이고 폐업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홍 지사는 이날 “노조와 대화는 해 봐야 안다”며 “폐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사태 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관광공사, 의료관광상품 수가 공개 앞장선다 (4. 24)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최초 부산지역 방한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의료수가 정보가 공개된 ‘의료관광코스 패키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의료수가 공개를 약속한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총 150페이지 분량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4개 언어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부산 의료기관 소개 및 의료기관별 패키지 상품소개(병원별 4개 총 80개 코스), 주요 관광지 소개 등이다. 관광공사가 가이드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의료기관의 비보험 항목에 대한 수가 정보가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파악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다 요금 및 악덕 브로커 등을 통한 바가지 수수료 청구와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만 의료관광사업단장은 “향후 전국적으로 의료수가 공개를 확산 시킬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료관광 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서 의료수가가 공개된 병원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3. 제약업계

#### ○ 동네약국, 대기업의 드럭스토어에 위협 (4. 16)

동네약국의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드럭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회)는 “CJ, GS, 농심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앞다투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약국, 화장품판매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며 드럭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네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신규 개설하는 약국보다 폐업 약국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전체 약국 수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전국 약학대학이 35개 대학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1800여 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네 약국의 폐업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낮아져 의약품 구입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럭스토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 약사회, 복약지도 강화 ‘팜봉투 서비스’ 추진 (4. 15)

대한약사회는 15일 대국민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약학정보원, 크레소티와 ‘약국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팜봉투 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의약품 식별정보 등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양질의 의약품 복약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인 복약지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었다”며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팜봉투 서비스는 약국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팜봉투 서비스는 약봉투 단면 또는 양면에 약제비영수증과 함께 최적화된 복약정보를 인쇄할 수 있도록 개발돼 약국에서 간편하게 서면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약안내 정보에는 약학정보원이 제공하는 약에 대한 효능, 주의사항 또는 임의로 약사가 등록한 복약안내문과 의약품의 식별을 돕기 위한 낱알식별이미지, 그리고 주의사항을 간단한 그래픽으로 표시한 픽토그램을 포함하며 약국마다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 사용량 약가연동제 걸린 22개 품목 최대 9.2% 인하 (4. 17)

지난해 하반기 많이 팔린 의약품 22개 품목이 사용량 약가연동제 모니터링에 걸려 최대 9.2%까지 약가가 인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 약가협상 2012년 하반기(7월~12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형 1 9개 품목과 유형4 13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의약품에 대해 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약가인하폭이 사용량 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개선안은 약가인하폭을 현행 10%에서 늘리고, 협상 대상 약제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동일성분 복제약 줄여야 리베이트 해결된다고 주장 (4. 17)

제약업체가 주고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 의약품(복제약) 수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동일 성분 의약품이 똑같은 게 너무 많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적정 제약사 수는 63개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9.5배인 593개소에 달한다”며 “제약회사와 동일성분 의약품이 너무 많아 리베이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값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다. 리베이트는 원인제거가 중요하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의약품 품목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품목은 조정해야 한다. 동일품목들이 많아 경쟁이 심해 리베이트가 있다면 품목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 제약사 해외진출 정보 활용 포럼 개최 (4. 18)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활용’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정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의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며 현지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영국 현지 변호사가 제약사의 영국 진출에 필요한 현지화 전략과 현지 R&D 자금 조달방법 등을 논의하고 M&A Tax 관련사항 등을 구체



적인 비교 분석한다. 이외에도 ▲영국 현지화 전략의 사례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수요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을 통한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 사례 분석(메디투스 정현호 대표, LG생명과학 전재현 센터장) ▲해외사례 중심의 정보네트워크 활용전략(Thomson Reuters 김진우 지사장)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약산업정보포털 활용방안(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제약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 하는데 있어 정보 네트워크의 활용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고가 항암제, 효과여부 모니터링 실시 (4. 19)

19일 건보공단은 비싼 약가로 등재돼 있는 고가의 표적 항암제들이 약가협상 당시 주장한 대로 환자들의 사망률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보험 급여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단의 이번 모니터링은 국내 제약사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적 항암제를 국내에 들여온 다국적제약사들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효능·효과를 주장하며 비싼 약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환자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여서 비싼 약가로 협상을 타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이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약가협상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 고가 항암제의 효능·효과를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최근 고가의 표적 항암제 1개 품목을 시범 케이스로 선정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 급여등재 이후 사망률과 약의 효능·효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을 통해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약가협상 등에 반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 안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조치 (4. 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안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센에서 이 제품이 초과함량 된 것 같다는 보고를 해왔다”며 “초과함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일단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안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대검찰청,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 착수 (4. 23)

검찰이 의약품 사용과 관련,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포착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6곳의 대형 대학병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받게 될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이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이들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영업이익 일부를 모(母) 법인이거나 관련 단체에 기부 형식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도매상들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적게는 4억원, 많게는 360억원을 제약회사 등에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들이 무더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유례가 없는 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 장학금과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 의료법에 저촉되는 않는다”고 주장,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가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 ○ 국경없는의사회, 세계 백신 업계에 신규백신 가격 인하요구 (4. 24)

‘국경없는의사회’가 백신제조 업체인 GSK, 화이자, 머크 등에 백신 가격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신

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향후 완전예방 접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의 사회의 주장이다. 24일 의사회에 따르면, 향후 10년에 대한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인 '백신의 10년'으로 추산된 총비용 57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백신의 구입비용으로 소요된다. 2001년 아이 한 명에게 6개의 질병에 대한 완전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선 1.37달러(한화 약 1540원)의 비용이 들었다. 현재 사용하는 백신 패키지(11개의 백신 포함)의 총 비용은 38.80달러(한화 약 4만3500원)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은 대부분 폐렴구균과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2개의 고가 신약 백신이 추가된 데서 발생한다고 의사회는 설명했다. 이 두 가지 백신 가격은 전체 비용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회는 "문제의 근본은 제약 업체의 백신 생산비용 불투명성이다. 또 이들이 저소득 국가 상황에 맞게 백신을 공급하는 것보다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제약협회, 지적권 분쟁 대응 협의회 운영 MOU 체결 (4. 24)

한국제약협회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24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지적권 분쟁대응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협약의 목적은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제약협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지적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사후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업무협약은 FTA 체결 등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일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업무경쟁력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MOU 체결로 제약협회는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회원사 현황, 지적권 분쟁 지원사업 수요 파악, 지적권 관련 실태 조사 및 자료 제공과 홍보를 협조하게 된다. 또 지식재산권보호협회는 분쟁 컨설팅 신청시 가점 부여, 해외에서 IP-DESK를 통해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신청시 우선 검토, 분쟁예방 세미나 강사 및 비용 일부 지원, 회원사 기술분야별 NPEs 분석, 분쟁 심층보고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은 단체 지원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지적권 분쟁 교육 설계 시 업종별 단체의 수요 반영 등 업무를 협조하게 된다.

#### ○ 제네릭의약품 심사자료 준비 고려사항 (4.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제네릭의약품 심사현황 및 주요 보완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는 지난해 공개한 '제네릭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현황 분석'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제네릭의약품 등의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업체에게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네릭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이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제네릭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을 가지고 전신순환혈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이 동등함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지난해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는 517건이 신청됐으며, 그 중 396건(76.6%)은 적합했고 120건(23.4%)은 일부 보완이 필요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에는 주요 보완사항 뿐 아니라 보완이 많은 자료를 준비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각각의 시험별로 구분돼 제공된다.

#### ○ 식약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강제 회수 (4.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이 2013년 5월(2011년 5월 제조)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할 것을 한국안센에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판매금지 이후 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감시 결과, 안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됐다. 이번 강제 회수·폐기 명령에 따라 안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안센의 '타이레놀현탁액'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 4. 직업단체

##### ○ 의료계 망라 대정부 투쟁기구 출범 '가시권' (4. 15)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제 4차 전체이사회'를 열고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관치의료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의권정립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비대위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던 때 따른 대표성 및 위상·역할에 대한 반성을 딛고, 의협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 명실공히 전 의료계를 아우르는 힘 있는 투쟁체로 확대·재구성한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비롯, 총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집행부(회장, 상임이사 등 5인) ▲광역시·도지부(회장 16인) ▲개원의협의회(회장, 각개협 회장 등 5인) ▲의학회(회장 1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1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1인)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1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1인) ▲전국 의사총연합(회장 1인) ▲대한의원협회(회장 1인) ▲민주의사회(회장 1인) ▲의료개혁 국민연대(회장 1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1인) 등이다.

##### ○ 의료정책연구소,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간 (4. 1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7일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 결혼·출산 연기, 모성 건강의 문제, 동료와의 갈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으로까지 연결돼 있다. 또 전공의 수련기간 중 임신과 출산은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수면박탈과 같은 임신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전체 전공의의 교육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전공의의 저출산 개선방안으로 단계별 개선방안과 주체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계별 개선방안은 출산 전, 출산휴가 중, 출산 후 단계로 구분했다. 출산 전 개선방안은 주로 법·제도에서 여성전공의가 임신과 차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공 선택 시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휴가 중 개선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병원협회 전공의 수련 표준지침'에 대한 것으로 '3개월 출산휴가의 의무화 준수', '2명 이상 출산시 추가수련 규정 삭제' 등이다. 출산 후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의사중심의 대체인력 확보 ▲병원 내외에 양질의 육아시설 확보 ▲수련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양육휴직 보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검토 ▲전체적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 등이 포함돼 있다. 주체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여자의사회의 경우 여성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여성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 남자간호사회 초대회장에 김장언 간호사 선임 (4. 21)

남자간호사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김장언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수간호사(54)를 선출했다. 부회장에 오경현 대길사회복지시설 푸른초장 시설장과 손인석 손재림의료재단 이사장, 전도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조용연 대한인명구조협회 사무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남자간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사업으로 남자간호사 병역문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간호학생 멘토링 사업, 간호학생 축구대회 지원 등을 의결했다.

## 5. 질병/기타

### ○ 신종 AI 중국 전역 확산 조짐 (4. 14)

중국에서 H7N9형 신종 AI환자가 6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14일 허난성 카이펑시 식당 요리사인 34세 남성과 저우커우시 65세 농부가 H7N9형 AI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또, 처음으로 상하이에서도 부부가 감염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6일 차이로 발병했는데 이는 신종 AI의 잠복기인 7일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인간 간 전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간 간 전염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상하이에서는 3명의 환자가 추가됐으며, 기존 환자 중 2명이 숨졌고 저장성에서 4명, 장쑤성에서도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 ○ 암환자 보호자, 정신건강문제 심각 (4. 15)

암환자 보호자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 암검진사업과 박보영 박사 등은 지난 2011년 전국의 암환자 및 보호자 990쌍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 증상 및 자살 충동과 자살 시도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암환자 보호자 중 82.2%는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38.1%는 불안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또 약 17.7%는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끼고, 2.8%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우울 증상이 있는 암환자 보호자의 경우 자살 충동 및 시도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 대한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배 증가했고, 불안 증상이 있는 암환자 보호자의 경우 자살 충동은 약 4배, 자살 시도는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보영 박사는 “암환자 보호자 중 불안 또는 우울 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자살의 고위험군으로, 암환자의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암환자 보호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혁 과장은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있는 암환자 보호자의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접촉 및 지지의 감소, 낮은 삶의 질이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있는 암환자 보호자의 자살 충동 및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암환자 뿐 아니라 암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복지부, H7N9형 AI 사람 간 전파 가능성 없다 (4. 16)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조류독감(AI)과 관련, 보건당국이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신종 AI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파 증거는 없다”며 “살아있는 가금류를 통한 인체감염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중국 보건당국이 첫 인체감염 환자 및 사망자를 발표한 이후 신종 AI의 유행은 지속됐으며, 15일 현재 중국에서 신종 AI로 인한 감염자수는 60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3명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는 대책반을 꾸려 운영에 나섰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중국 AI 발생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 발열감시를 실시하는 등 집중 검역을 하고 있다. 또 국내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진단체계를 마련했다. 그밖에 보건당국은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 인프라를 점검하고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주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국내 유입 등 위기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것”이라며 “WHO, CDC 등 해외주요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영국, 홍역 재유행 (4. 19)

영국 웨일스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크게 번지고 있다. 홍역은 한 번 걸린 후 회복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되어 다시는 걸리지 않으므로 예방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예전과 같은 대유행은 드물며 거의 퇴치된 것으로 여겼던 영국에서의 발병은 이례적이다. 웨일스보건청에 따르면 지난달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16일부터 스완지시티 지역에서만 43명이 늘어나 전체 발병자는 80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까지 77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홍역의 유행을 막기 위해 스완지시티, 니스포트벨벳, 카디프시티 등지의 청소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홍역은 통상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한 소아가 홍역 환자와 접촉한 경우 아이의 연령, 면역 상태에 따라 면역 글로불린을 맞거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웨일스보건청은 유년기 이후 재접종을 받지 않은 10~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 대만서도 신종 AI 환자 발생 (4. 24)

중국 이외 지역인 대만에서도 H7N9형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대만질병통제센터(CDC)는 24일, 대만 남성이 신종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 쑤저우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50대의 이 남성은 최근 귀국한 뒤 3일 만에 고열에 시달리는 등 AI 증세를 나타내 진료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환자는 B형 간염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험하다. CDC는 이 환자의 가금류 접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가금류 농가 등의 방역도 확대하는 한편, 재래시장 등의 가금류 도살행위를 즉각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24일 현재 중국에서는 108명이 감염됐으며 22명이 사망했다.

#### ○ 日, 신종 AI 법정전염병 지정 (4. 24)

일본이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4일 열린 심의회에서 전염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H7N9형 AI를 5월초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전염병법은 전염병을 위험에 따라 1~5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H7N9형 AI는 4종 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관련 법정전염병 지정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06년 H5N1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接客업·식품가공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감염이 의심되는 입국자들에게 건강진단 등을 의무화한다. 후생노동성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치사율이 20%에 이르는 등 높아서 H5N1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간 전염 불확실 (4. 26)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조류에서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람간 전염 가능성은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홍콩대학 연구진은 '란셋' 최신호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중국 동부 절강성에서 AI에 감염된 4명의 환자에 대한 사례와 가금류를 분석한 결과, 상기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 환자가 가금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닭 20마리, 메추라기 4마리, 비둘기 5마리, 오리 57마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닭 20마리에서 4마리, 비둘기 5마리 중 2마리에서 H7N9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나 오리나 메추라기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연구진은 또한 385명의 가족, 동료 및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14일 동안 추적 조사했으나 H7N9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H7N9 바이러스가 포유동물 감염에 특별히 적응하는 몇가지 유전적 특성을 개발한 증거가 있어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수도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환자 한 사람과 닭 한 마리의 H7N9 유전자 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 바이러스의 유사성을 발견했으며 가금류로부터 사람에게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 ○ 에이즈 백신개발 대규모 연구 중지 (4. 26)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중지되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HIV는 백신에 대한 연구결과, 효능성을 입증하지 못해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 연구소는 19개 도시에서 게이 남성을 포함한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효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참가자의 50%는 NIH에서 개발한 백신주사를, 나머지는 위약주사를 맞게 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결과 백신 주사를 접종받은 사람들이 위약 주사를 받은 사람들보다 HIV에 감염된 수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써 HIV/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